

“뺄은 말에 책임져야”...與 발언 파고드는 국민의힘 ‘역공’

이낙연 국정조사 언급 “당에서 거부? 레임덕 왔나” 윤호중 ‘찌라시’ 발언 등에 “사과 안 하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협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권 측의 불협화음과 말실수 등에 집중하며 빈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퍼져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간극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여당을 몰아세웠다. 특히 이 대표의 주장과 당내 여론이 다른 점을

짚으며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이냐”며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독촉하기도 했다.

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던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

를 펼쳤다.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사보임하라고 요구하고, 기자 출신 조수진 위원에게 ‘찌라시 만들 때 버릇’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밖에 길이 없다”며 향후 법사위 일정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이 사과하면 참석하겠다”고 항의의 뜻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략 지점들을 활용, 공수처에 관해 힘을 쓰지 못하던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과의 힘겨루기와 별개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의 백드롭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트위터와 발언으로 채웠다. 현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구들로 풍자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6일 백드롭에는

문 대통령이 2013년 9월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트위터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게재했던 글이 실렸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음날인 27일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던 당시 사진과 함께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던 글이 실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등 지도부가 과거에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게 여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1인시위 등의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힘이 팔려도 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한 맞서 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태도로 여론을 바꾸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며

“여당에 숫자로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수능시험장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美 클린턴 3기’ 바라는 이인영...꾸준한 대북 유화 손짓

코로나 지원·연락소·경협 준비 등 러브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국민들의 대북 정서는 냉랭하고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러브콜은 이어진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지원을 시사했다가 보수진영으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대북 지원을 거론하

자 너무 성급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의 대북 유화 손짓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 23일 북측이 폭파한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대표부로 격상시켜 복원하고 개성·신의주·나진·선봉에 연락소 및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소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삼성·SK·LG·현대 등 4대 그룹과 만난 자

리에서는 남북 경협 시대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 장관의 대북 메시지를 일제히 공격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대북 지원이나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금태섭 “文대통령, 책임 회피 비겁...윤석열 입장 밝혀야”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찰총장 사퇴 거론한盧와 비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며 “더 이상 비겁할 수 있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으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사찰인지 아닌지 어지럽게 공방이 오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가 법무부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지도부를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지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과정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